



어제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중에 두 분의 글을 반론차원에서 소개하겠다. 우선 필명 '쓰레기청소부'의 의견이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대리기사들이 모래알 같아서 뭉치지 못하다보니 그간 대리운전 회사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삭이고 있었어요. 취재해보면 왜 대리기사들이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환영하는지 알 거예요. 대리비가 싸면 짬수룩 회사가 힘든 게 아니라 기사가 힘들어요. 피눈물 납니다."

'나는 간심이'라는 아이디 쓰는 분 글이다.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은 힘없는 대리운전자에게 100% 이익입니다. 물론 변호사업자엔 타격이 크지만 뭐라 해도 몇 개의 솔루션 사업자와 전화변호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그들의 입장을 무시해야 할까요. 커다란 자본의 다음이 지금 구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시스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대리운전이라는 직종이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리운전은 미터기로 움직이는 택시와 달리 운임이 일정하지 않다. 고객 목적지와 시간 등에 따라 운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고객과 대리기사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 편이며, 고객 불만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시장이다.

수수료도 문제다. 중개업체의 높은 수수료가 불만이던 대리기사들은 반기겠지만, 다음카카오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수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슈퍼 갑' 논란이 생긴다. 다음카카오가 수수료를 10%대로 낮춘다 하더라도 대리기사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다.

골목상권 침탈 논란도 넘어야 할 벽으로 꼽힌다. 콜택시 업체는 나비콜, 엔콜 같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이었지만, 대리운전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 중심으로 돌아간다. 다음카카오가 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 논란이 일 대목이다."

대리운전 기사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돼야 하겠지만, 슈퍼갑의 등장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줄지는 미지수다. 하여간 대기업의 진출은 여러모로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방패막이로 구한 대표 집필자가 이 정도였으니 그 뒤에 숨어있는 집필자들의 의식 수준은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명예 집필진 사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공식 언급도 자체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은 정부에 맡기자고 밝혀 온 만큼 정부 입장으로 대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정화 추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무리함과 무모함이 빛을 참사라며 국정화를 단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성수 대변인 발언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이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유병언 일가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쓰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은 국가가 환수하기로 한 유병언 일가 재산 35억 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동물 모델에서 찾은 캡사이신 반응 시스템이, 파킨슨병 환자 뇌 검사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병관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의 말이었다. 경희대 진병관 교수팀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생쥐에게 캡사이신을 주입했더니, 뇌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많아지면서, 망가진 도파민 신경세포가 되살아난 겁니다. 연구팀은 매운 고추를 즐겨 먹는 게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제공

-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

[한겨레] 제자들 만류 뿌리친 최 교수…'성추문' 오점만 남기고 퇴진

어제 조선일보 보도라며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린 박근혜 정부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성희롱 파문. 결국 최 교수가 집필진 사퇴를 선언했다. 관련한 한겨레 기사 첫 줄이 이렇다. “산골 도사가 개울 있는 속세 나온 기분”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최 교수. 그러나 은퇴한 지 8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온 ‘노학자’는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산골’로 돌아가게 됐다.”

어제 석간브리핑에서 최 교수가 하기 싫는데 못한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벌임으로써 고의로 그만두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전해드렸는데. 한겨레 기사를 읽다보니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일을 설명하며 “양복까지 다 갖춰 입었는데 아침 8시쯤부터 제자들이 또 와서 만류했다”고 하더니, 기자들과 마주 앉아 그동안 자신이 집필에 참여했던 역사교과서를 보여주며 앞으로 어떻게 집필할지에 대한 계획을 펼쳐 보였다.

문제가 됐던 최 교수의 성희롱성 발언은 10여개 신문 방송 기자들이 떠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자가 마지막으로 자택에 남았을 때 나왔다. 무슨 성희롱성 발언이었느냐.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기자들한테 “사랑이 끝났다”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여기자들이 궁금해하자 “(정답은) 빼”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다. 또 MBN은 “볼에 뽀뽀하고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걸 확인하는 MBN 기자에게 “나 평소 때 그래요”라고 말했다. 성추행은 부인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 자택을 나선 최 교수는 국사편찬 위원회를 찾아가 김정배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조선일보 편집국을 찾아가 그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최 교수 성희롱 최초 보도를 한 조선일보의 사퇴 기사는 딱 한 줄이다. 6면 맨 밑바닥 1단 한 문장.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500m 거리가 되고 걸어서 15분 걸리는 문제점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전화는, 또 차는 뭐하러 두는 건지. 여하간 청와대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대통령 집무실 곁에 비서동을 놓자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경향신문] 고고학 학회 9곳 ‘추가 집필 거부’ 선언…‘여기자 성추행’ 최몽룡 교수가 회장 지낸 한국상고사학회도 동참

최몽룡 교수는 한국상고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상고사학회를 비롯한 9개 고고학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한 고고학계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우리 학회 회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화 반대를 선언한 역사학회는 지난달 전국역사학대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28개 학회에 이어 36곳으로 늘어났다.

[경향신문] [국정화 불복종 확산] 최대 학회 역사 연구회 “대안 역사책 편찬위 구성 마쳐”

이렇게 국내 최대 역사학회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키로 한 한국역사연구회가 대안 한국사 책을 제작·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도서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됐다”며 “학계 통설에 입각해 차분하게 쓰인 현재의 교과서들에 너무 이념 공세가 심하다는 생각에 응답 차원의 책을 내겠다는 측면과 국정화가 확정될 경우 연구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봄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미 기획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전근대·근현대 2권 분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을 걷어내면 고등학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판사도 이미 정해졌고, 50~60명의 필자를 선정해 집필에 들어가 국정교과서보다는 조금 늦게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역사 대안교과서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역사학회의 대안 책 발간과 학교에서 교과운영위원회와 교장 결정으로 보조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막을 근거가 없다. 판 방법으로 막겠지. 신상털이, 계좌추적, 이도저도 안 되면 카톡으로 헛소문 유포, ‘북한 돈 받았다는니’하는.

[한겨레] 우익단체, 학생들 실명 거론하며 험담… “징계하라” 전화공세

누구를 시켜서 하겠나? 우익단체 아닐까? “제가 잘못된 것 인정하고 앞으로 몰랐던 부분을 배워나갈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선생님들에게도 향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워요.” 10대 소녀는 결국 울고 말았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학생은 결국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국정화를 반대하며 ‘좌파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화를 찬성하는 보수 성향 단체와 개인들이 어린 여고생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일반적인 항의전화 수준이 아니다. 지금 학교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신변도 아주 심각하다. 일베 사이트를 보니 가족이나 부모들까지 신상 털기에 나선 것 같다. 학생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 고등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는 공인도 아닌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고, 해당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그렇다. 학생을 표적 삼은 자들이 무슨 학부모인가 싶지만.

[경향신문] 인터넷 '국정화 반대'에 명예훼손죄 들먹이는 경찰

여기에 경찰도 한 술 더 떠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대 행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례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노망들었나...명단 거론만 돼도 친일파’(중앙일보), ‘최몽룡은 친일학자?...SNS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근거 없는 비난 쏟아져’(연합뉴스), ‘국정화 찬성 학자들 신상 털기...제2이완용, 역사오적’(문화일보) 등의 기사를 적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국정화 찬성 보수단체 또는 보수 성향 누리꾼들의 국정화 반대 시민에 대한 폭언성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한 그 여학생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집필진 섭외 및 구성이 어려워지자 국정화 반대 학자나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최몽룡 교수 찾아가 설득한 제자들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식의 새누리당 의원의 선동에 맞장구치기도 했다.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싶다.

[경향신문] 세월호특별법 1년...“한 걸음도 못 나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이다.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라는 말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1년이라니까 갑갑하네요.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발부터 ‘세금도둑’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제약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빨리 끝내라’는 의미로 예산과 법률안 개정에 소극적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빈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지난 1년간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예산 지급은커녕 기본적인 업무 협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에 의거해 만든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리켜 “세금도둑”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을 만들면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을 넣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에 극우·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특조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고비마다 특조위를 내부에서 흔들었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7월 특조위가 인력 채용을 할 시기에 “채용이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2주 넘게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사퇴했다. 최근 사퇴한 석동현 전 위원은 부산 사하 을에서, 황전원 위원은 김해 을에서 여당 후보 출마를 준비하는 등 특조위를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을 제때 필요한 만큼 지급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 7월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특조위가 신청한 160억 원의 절반 수준인 89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책정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특조위가 신청한 액수의 1/3만 받아들이는 상태다. 조사활동을 위한 핵심 사업인 ‘인양 선체 정밀 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특조위 활동은 내년 6월30일 종료된다. 연장?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았다. 한편 그들의 말 중 맞는 게 있다. 당사자는 특별조사위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 그렇다. 정부 여당의 꼬나풀은 특별조사위에 참여해서는 안 됐던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이런 나라에서 어떤 군인이 목숨 걸겠는가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 세 번째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자. 제목은 ‘이런 나라에서 어떤 군인이 목숨 걸겠는가’다. “정부가 군 골프장 운영을 위해 쓰는 예산은 600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40조원 가까운 국방예산 중 수백억 원은 고위급 장성을 비롯해 군 간부들의 품위 유지 명목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같은 예산편성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벌이다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광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 중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해 유서까지 써 놓았다”고 말했다. 군에서 부상을 입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 부담을 위해 빚까지 지게 된 현실이 야속하고 분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관련법상 민간병원 요양비는 최대 30일까지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광 중사 어머니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임무 수행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허언(虛言)이었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광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는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

놓았다.

곽 중사가 치료를 위해 진 750만원의 빚은 가족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이게 나라냐”는 비난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작전 수행을 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 한 명도 못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걸려고 할까. 골프장 예산이 병사 치료비보다 더 중요한지 국방부에 묻고 싶다.” 한 줄 버릴 게 없다.

[경향신문] 유엔 기구 “통진당 해산 결정, 우려”… 보도 자료에 해당 부분 삭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혐의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히고는 “정당 해산은 극도의 제재로써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영장 없는 통신감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통신수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별 등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해 “버스 봉쇄 등의 평화적인 집회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게다가 늘 하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보도 자료로 소개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 부분은 빼놓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정당 해산 결정이 다시 공론화되는 걸 막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與, ‘팩스 입당’ 김만복 출당… 가닥

새누리당이 지난 8월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만간 제명 등 출당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팩스로 입당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당비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당적을 숨긴 채 지난 9월 14일 10·28 부산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팔불출은 김무성 대표다. 김 전 원장의 입당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입당한다는 것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원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신세계 총수일가 차명주식 보유 의혹 사실로

신세계그룹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을 이명희 회장으로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8월에 CBS가 최초 보도

를 했던 건데 신세계가 인정한 꼴이 됐다. 왜 차명주식을 뒀느냐. 20~30년 전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 때문이었다고. 그 말로 용서가 될까. 그렇지 않다. 탈법 행위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결과 배당소득 탈루 등 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신규 순환출자’ 위법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B→C→A’식으로 계열사 간 꼬리를 물고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집단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이나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생겼다. 공정위가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를 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주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기 위해 해당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중앙시평]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위작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중앙시평이 주목된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했는데,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1대 99로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최소한의 기준을 애덤 스미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여야 한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창한 이유는 소수의 특권세력이 독과점을 통해 부당한 부를 향유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어느 사회라도 번영하거나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와 국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한 사회를 희망한다면, 수치로 표현되는 ‘경기회복’ 또는 ‘성장’을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철학을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세계일보] 김수남, 우병우와 4차례 ‘한술밥’… 청문회 쟁점될 듯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 식구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4차례나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김수남 대구, 우병우 경북 봉화 출신으로 지역적 배경도 공통적이다. 청와대가 일주일 전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터져 나왔던

이유이다. 게다가 김수남 후보자는 평검사 시절인 1990~199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연수원 3년 후배인 우 수석과 첫 대면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특수부 검사였고, 초임 검사였던 우 수석은 주로 형사부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대구지검에서 재회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2부장, 우 수석은 특수부장으로 각각 발령을 받아 1년 남짓 같은 건물에 근무하며 ‘한솥밥’을 먹었다. 당시 대구지검은 부장검사급 간부가 10명 안팎에 불과해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법무부 시절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에 임명된 우 수석이 2007년까지 2년간 ‘장수한과장’으로 재직하는 사이 김 후보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거쳐 2006년 법무부 대변인으로 부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째 TK 출신 검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두 사람은 네 번째 한 식구가 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금융조세조사부 등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 기용됐다. 우 수석도 검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보직 중 하나인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아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김 후보자가 우 수석의 직속 상관인 것이다.

[한국일보] 70%나 깎인 교통사고 보상…‘기왕증’이 기가 막혀

오영희 씨는 전북 김제시 봉남면 마을 밭에서 일군 옥수수 등을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다. 선천성 시각장애 1급인 오 씨는 가까이 있는 사물 형체만 희미하게 인식할 정도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50년 넘게 다닌 김제의 시장 길이 환했다. 사고가 난 날도 혼자 제수용품을 장만하러 장을 찾았다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받았다. 오 씨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오 씨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치료비마저 막막해진 막내아들 최재호 씨는 소송을 제기, 법원의 화해 권고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번엔 보험사가 반소를 걸어왔다. 사고 10개월 후인 2014년 5월이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가 70%로 판정이 난 만큼 그동안 지급한 치료비 6,000여만 원 중 약 5,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왕증, 이게 뭐냐.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있는 질병, 즉 기왕증이 사고 후유증 또는 새 질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정도를 뜻한다. 기왕증은 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종류, 정도에 대한 정립된 이론이 없고,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다. 애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거의 본인부담금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시스템 상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중간에 이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오 씨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내쫓기게 될 딱한 사정이다.

[한국일보] 식용 아닌 반려동물로... 도사건들 새 둥지 틀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요즘 식용 개를 키우는 농장에다 연락해서 개를 팔라 그리고 농장을 접어라 이런 전화를 넣는다고 한다. 이 휴메인소사이어티의 노력으로 도사건 120마리는 모두 미국으로 보내졌고, 현재 90%가 입양돼 새 가족을 찾았다. 휴메인소사이어티가 파악한 한국 개고기 시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대규모 농장 중심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한편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국내 동물보호단체들도 휴메인소사이어티와 손잡고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주말 내내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겠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는데, 서울이 12도, 대구는 15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9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거세게 일겠다. 이번 비는 월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후로도 크게 추워지지는 않아서 올해 입시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건브리핑’은 “러시아는 왜 ‘국정’을 단념했나”라는 러시아 사람 일리아 벨라코프 씨의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다. 민주주의적 변화를 요구 받은 러시아 새 정부 아래서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소련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통제가 줄어들면서 역사 교과서도 출판사마다 또 대학마다 천차만별로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엄하게 비판해 왔다. 소련식 역사 교육을 찬양하면서 2013년 2월 국회 연설 때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줘야 하고 애국자를 키우기 위해 한 가지 역사 관점으로 통일해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년 반 뒤 포기했다. 국립학교에서는 ‘국가추천’이라는 문구를 단 몇몇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교장이나 교직원들이 역사 교과서 선택권을 예전처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서 만들어봐야 가르치는 현장에서 외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11월 9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건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정선거 야당탄압 언론압살 세월호참극 서민경제파탄 안보무능 교과서국정화 국민갈등...

우리가 광장에서 만날 이유는 충분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오후 광화문에서